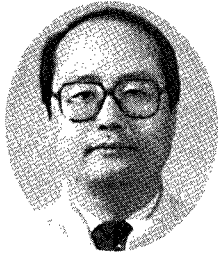


韓半島와 反核運動



허영희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원자력사업진흥실

현대의 문명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력이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도 여러가지 있으나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전만이 경제적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적절한 발전방식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핵실험 반대에서 출발한 반핵운동은 대량 살상무기인 핵무기의 반대운동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으로 비약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가 뒤늦게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 변화속에서 급격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세력팽창의 원동력이 「자연」을 되찾는다는 순수한 환경운동에 기초하지 않고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위 「이념」을 달성하려는 변질된 사회운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반핵단체가 그 합의를 무조건 방해함으로써 압력단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결론이 없고, 책임도 없고, 끝도 없는 논쟁이 지속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판단력은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80년대 중반에 태동한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은 미군 핵무기기지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관념적 반미를 반핵으로 대체한 것일뿐 당시로서는 호소력이 전혀 없었다.

즉 분단과 핵무기와 민족의 해방과의 관계로부터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증명하려고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주로 종교계와 반공해단체에서 반핵운동과 결부하여 원전건설 반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종교계, 지식층, 학생층 및 일부 대중들 사이에 반핵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주로 반미와 결부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이용되어온 면이 강했다.

80년대 후반의 민주화선언 이후 반핵, 반원전단체가 활기를 띄고 대거 출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단체들도 반원전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원로의사들의 친목단체인 「인수회」가 미국, 옛 소련을 비롯한 세계 55개국의 지부를 가진 「국제핵전쟁예방의사연맹(IPPNW)」에 가입, 한국지부를 설립하였고 젊은 의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산하에 핵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한편 기존의 공해추방운동청년연합회와 공해반대시민협의회가 통합하여 조직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공식적으로 반원전운동을 표방하고 산하 반핵위원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원전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핵자료정보실」은 반핵논리의 개발을 위해 맹렬히 활동중이다.

이밖에도 각 원전 부지지역 혹은 인근지역에서도 반원전운동을 위한 지역단체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특히 「공해추방성직자협의회」는 반핵주일을 제정하여 홍보활동을 벌

이고 있으며, 원전지역에까지 진출하여 지역주민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피해의식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핵」에 관한 위기의식 등으로 대대적인 반핵 분위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반핵단체는 방사능을 죽음의 공포와 연결시켜 지역주민들의 욕구수준을 생존권 확보라는 제일 낮은 단계에 머물도록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증명될 수 없는 거짓 주장들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연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계의 인사들이 감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태가 더욱 비이성적으로 되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욕구가 매우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죽음에의 공포는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반발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원자력계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일부 반핵단체에 의해서 그들에게 상반되고 유해한 정보로 받아들여지도록 가치판단 기준이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은 그 좋은 예이다. 국민들은 이 운동에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일부 반핵단체의 집중적인 공략에 의해 쉽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반핵인사들은 문제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대화창구가 없는

폭력적인 시위가 쉽게 유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지역이거주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현상으로 보인다. 일부 반핵단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철저히 이용하고 조장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반핵운동에서는 또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몇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정치계인사나 재야인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하여 급진적인 일부 반핵단체와 쉽게 야합함으로써 이들 반핵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그들의 억지 명분을 합리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계에서도 독자층을 의식하여 흥미위주의 기사만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반핵논리만 가장 양심적인 논리인양 보도하는 예도 있다. 그리하여 일반국민들에게는 「원자력혐오증」이 「핵」이라는 병명으로써 전염되고 있다. 이러한 반핵 분위기가 지식층까지도 깊이 침투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서대립체제의 붕괴후에도 이념투쟁이 계속되는 특이한 지역이다. 한국의 반핵운동은 기존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후기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생태주의에 입각한 서구적인 반공해운동과 비슷하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신이데올로기를 반공해운동의 근간으로 하고 「자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반공해운동에 반하여 국내의 일부 반핵단체는 그 근간에 민족통일, 미제축출, 독

재타도 등 「이념」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한 권력 지향성이 강하여 기존 정치세력이나 재야세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반핵단체의 가입자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지식인, 공무원, 실업자 그리고 특정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며, 공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순수한 반공해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은 항상 이중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즉 결과가 자신들의 명분에 확실히 도움이 되거나 정치적 이익이 예상될 경우 법률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실시하지는 주장이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다수결원칙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는 지역주민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소수의 정성적이고 단호한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이 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또한 「끊임없는 반복의 원칙」을 이용하여 농어민 계층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이들은 공해문제의 비평방법을 철저히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쪽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경험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에서의 기술주의는 쇠퇴하고 있다. 「운동이 없는 곳에 대책은 없다」는 대전제하에 주민을 시위에 동원하는데 이를 위해 일부 반핵단체는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날조하기까지 한다. 그 예로서 원

전사고에 대한 이들의 보고서가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허위 보고서의 배포로 의사결정권자나 일반대중을 불안하게 하고 날조수단까지 동원하여 그들의 소위 「이념」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자신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증명의 책임을 악덕 고용주(?)나 어용 과학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문제시되고 있는 일부 반핵운동의 전략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정한 전문가와 유능한 권위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감을 파괴
2. 유언비어 날조, 유포에 의한 군중심리 자극
3. 과학기술적 문제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전환
4. 사심이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일반대중에 밀착
5. 동조하는 언론인을 통한 왜곡 보도로써 일반대중에게 잘못된 선입감 형성

국내 일부 반핵단체에서는 반핵운동의 논리를 한반도의 3대 모순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반핵운동을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정의하면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켜야 하며, 휴전협정을 폐지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반공이념을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반핵운동을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원자력발전소는 국민들의 의사와 권리가 무시당한 채 도입되었으므로 곧 민족

의 생존을 외세에 팔아먹는 일이고, 반핵운동은 이러한 본질을 폭로하고 민족의 생존을 쟁취하고자 하는 운동이며,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핵운동은 민중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운동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셋째는 반핵운동을 분단극복운동, 평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모든 외세의 논리를 극복해야 하고, 모든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며, 민중의 통일외지를 모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정부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운동과는 거리가 먼 반핵운동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6일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폭로된 바 있는데 체제를 전복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반전, 반핵」을 이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의 대부분의 반핵단체는 직접, 간접으로 모든 반핵시위에 관여함으로써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원자력산업계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과의 공개적인 사진합의를 전제로 하는 원자력시설 입지는 결국 일부 반핵단체의 도마 위에서 계속되는 난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대화를 거부하는 「무조건 반대」만을 유도함으로써 손쉽게 반원전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결성된 지역 반핵단체들도 단순한

자생단체라고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의 결성 초기부터 모든 시위활동에 이르기까지 일부 핵심 반핵단체의 밀접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반핵단체간의 전국적인 연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반핵단체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층의 일부 반핵인사들까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에 설치된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북한이 자구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군사용 플루토늄의 제조가 가능한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만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는 1기도 없이 군사용 원자로를 몰래 가동시키고 있는, 그래서 국제 핵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자연료 가공공장 등의 건설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 심지어는 우리 인체까지도 그 중량의 99.9% 이상이 바로 핵의 무게인데, 막연히 「핵」을 두려워만 하는 것은 오히려 희극적이기 때문이다.■